

Online Series

2024. 03. 19. | CO 24-23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

현 승 수(국제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러시아 대선과 푸틴의 압승

2024년 3월 15~17일까지 러시아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2000년부터 대통령직을 이어가고 있는(2008~2012년은 총리직)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번에도 후보로 나선 가운데, 선거 전부터 이미 그의 당선은 확실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안팎의 관심은 푸틴의 당선 여부보다는 득표율에 쏠려 있었고, 선거 결과는 87%를 넘는 압도적인 수치로 푸틴의 승리를 확정 지었다.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향후 6년이며, 2030년에 또 한 번 집권 연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2036년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압승은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을 러시아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푸틴 재선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 행동이 있었고 러시아에서 선거가 치러질 때면 으레 거론되는 부정 선거 의혹이 이번에도 제기됐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보수주의와 애국주의, 반서방 정서로 충만한 러시아는 더 이상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정치와 사회, 경제가 모두 전시 동원 체제로 탈바꿈했고, 푸틴 지지가 나라 사랑과 동의어로 간주되는 형국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긴 현재, 러시아는 서방의 금융·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경제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어,¹⁾ 푸틴의 리더십과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이 정당했다는 선전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1) 러시아통계국은 러시아의 2023년 국내총생산이 3.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러시아 경제가 2023년 3% 성장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6%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푸틴 집권 5기의 대외정책 노선

세계 질서를 교란하고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기로 작심한 러시아는 푸틴 집권 5기에도 강도 높은 반미, 반서방 공세 외교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우위 속에 전쟁이 종결된다 해도, 러시아와 미·서방 사이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러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정책결정자들은 결코 미·러 관계의 정상화를 거론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끝장내고 러시아를 포함한 몇 개의 지역 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다극화한 세계 질서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미국의 패권 종식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공세적인 대외 노선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더욱이 서방 국가들의 대러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EU의 지원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푸틴은 더욱 과감한 방법으로 미국과 서방의 위상에 타격을 가하는 대외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푸틴 집권 5기 대외정책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푸틴이 지목한 나토의 동방 확대를 차단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를 이간하고, 유럽 내 분열을 획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나토와의 접경지대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EU 국가들의 분열 촉진 요인, 즉, 대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피로감,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중단에 따른 경제난 심화, 유럽 내 반미·친러 성향의 극우 정당 집권 가능성,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시 미국과 나토 간 갈등 상황 등을 이용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가 서쪽 국경에서 나토를 견제하고 유럽과 대치하기 위해서는 동쪽 국경의 안정된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와 전방위적 협력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특히 서방과의 ‘문명적’ 단절을 선언한 러시아는 동쪽과 남쪽으로 눈을 돌려 중국, 이란, 북한을 비롯한 유라시아 역내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바, 이 지역에 새로운 권위주의 국가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을 이용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리아, 이란과 같은 반미·친러 성향 국가들과 협력함은 물론, 미국과 소원해진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러시아 외교의 주 무대가 될 전망이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상당수는 소련 시기부터 러시아



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 왔으며, 식량과 무기를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 표결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가 기권표를 던진 사실도 러시아와 아프리카 관계의 깊이를 보여준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착취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지주의 이념으로 결속하겠다고 선언했다.²⁾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푸틴 집권 5기의 한반도 정책도 위에서 고찰한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입안 및 추진될 것이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다음 세 가지 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러시아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 학계 일각에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가운데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이며 중립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가 통일 한반도와 이익을 공유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180도 달라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반미와 반서구로 수렴되며, 한반도에서 미국과 그 동맹 세력에 맞서 투쟁하는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부터 눈에 띄게 급진전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단순히 북한 제 무기·타락과 러시아 군사 기술의 맞거래가 아니다. 러·북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세계 인식과 이익이 반미 연대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4일 러·북 정부 간 경제·문화협력 협정 체결 75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북 양국 간의 전통적인 형제애적 우애와 전면적 협력 관계가 유례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현 국제정세 악화의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양국의 평가가 일치하고 대다수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접근이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³⁾

2023년 8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9월 러·북 정상회담,

2) Witold Rodkiewicz, “An anti-colonial alliance with the Global South. The new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Centre for Eastern Studies (OSW)*, April 7, 2023, <<https://www.osw.waw.pl/en/publikacje/osw-commentary/2023-04-07/anti-colonial-alliance-global-south-new-foreign-policy-concept>> (검색일: 2024.3.18.).

3) “러 외무차관 “북한과 관계 유례없이 높은 수준…실질협력 강화”, 『연합뉴스』, 2024.3.15.



2023년 10월과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양국 외무장관 회담 등 러·북 사이에 긴밀한 고위급 접촉이 잇따랐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사건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정상 간 친밀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한 2024년 들어 러시아 관광단의 북한 방문, 북한 정보산업성, 수산성, 체육성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2024 세계청년축제에 북한 대표단 파견 등 양국 간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도 활발해졌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형태로 북한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심산인 듯하다.

하지만 러·북 관계가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사실, 러시아는 북한 경제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대북 제재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면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한들, 폐쇄적이고 기반이 취약한 북한 경제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올레그 다비도프 선임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문제는 북한이 그러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 비용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 또는 ‘원조’를 통해서만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전통적인 북한의 수출품(석탄, 철광석, 섬유, 생선 및 해산물)에 거의 관심이 없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았던 가장 좋은 시기에도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⁴⁾

따라서 러시아의 노력도 북한 경제를 궤도 위에 올려놓을 만한 성과를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강도 높은 서방 제재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러시아 경제를 생각하면 러·북 경제 협력의 미래는 더욱 어둡다. 하지만, 러시아는 김정은 체제가 위기를 맞지 않을 만큼의 경제 협력과 원조를 병행하면서 북한이 지정학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북한에 대해 그동안 보여 왔던 방관자적 입장을 버리고 적극적 지원자로 나설 수 있으며, 북한 경제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변화시키려 노력할 것이고, 중국과 연계해 중·러·북 상업 지대 건설도 추진할 수 있다. 1990년대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 체제 붕괴 위기까지 갔다가 한국의 ‘햇볕 정책’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사례가 있다. 이제 북한

4) Давыдов О.В., “Россия, КНДР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МЭМО РАН, 2023.10.23.) <<https://www.imemo.ru/publications/policy-briefs/text/russia-north-korea-and-security-on-the-korean-peninsula>> (검색일: 2024.3.17.).



체제의 생존을 위해 러시아가 ‘햇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 협력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치·안보 협력은 불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러 관계는 건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비우호국들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는 논리로 한·러 관계의 파탄을 막고자 하며, 우리 정부도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러·북 간 군사 협력, 대북 제재와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러시아의 거친 언행은 한·러 관계가 정상화되기 힘들 수 있다는 불안한 예측에 힘을 실어준다. 한국은 국제법 준수와 보편 가치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는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 보듯,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국은 한반도 접경국으로서 러시아와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한다.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와 구축한 경제 협력의 틀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묵인 또는 부추기면서, 핵 위협 앞에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폄하한다면, 한국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

향후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동방 전환(Turn to the East)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⁵⁾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낙후된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 러시아가 추진하고자 했던 남·북·러 삼각 경협도 한국의 발전 동력을 러시아의 아태 경제 편입과 극동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정치·안보상 인식 차이가 상존함에도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조건이 갖춰지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며, 러시아가 북한의 핵 도발을 용인하면서 한국 또는 한·미·일에 안보 불안의 책임을 전가하는 한, 한·러 관계 정상화의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셋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중국과의 조율과 공조를 유지할 것이다.

5)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정치학자 세르게이 카라가노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새롭게 조성된 국제 환경 속에서 러시아가 서방과 관계를 정리하고 자급자족적인 문명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방 전환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Сергей Караганов, “Сибиризация: Второй поворот России на Восток лежит ‘за Камнем’”,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February 5, 2024, <<https://rg.ru/2024/02/05/reg-sibfo/sibirizaciia.html>> (검색일: 2024.3.17.).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북 간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정부는 중·러·북 연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반미를 공동의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준군사동맹 차원까지 관계를 격상시켰으며, 제재로 위기를 맞은 러시아를 중국이 도와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 목표가 다극화 세계 질서 구축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일치하더라도 이를 달성하는 방법, 즉 전술적 차원에서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정면으로 이를 비판하고 나선 사실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⁶⁾ 특별히 한국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중국이 러·북에 가세해 반미 연대로 나아갈지 여부이나, 이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중국은 밀착하는 러·북 관계에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형세이며, 북한에 대해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는 후원 세력으로 나서는 것도 불편해하는 모양새다.⁷⁾ 하지만 중·러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체제의 생존을 고민하는 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서 중·러는 소소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면서 조율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다. 더욱이 서방과의 관계가 단절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에서 갈등을 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론

사실, 이상의 노선들은 과거 한·러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때에도 러시아가 견지해 오던 원칙이다. 달라진 부분이라면, 러시아에게 있어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협력국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한·러 간 경제 협력 수준은 과거보다 더욱 정치·안보 요인에 제약받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호언하는 북한이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은 한국과 협력국의 대북 억제 노력을 빌미 삼아 신냉전 고착화를 노릴 것이다. 이때, 고립되고 비타협적이며 공세적인 푸틴 집권 5기의 러시아가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과 광인 전략에 영감과 오판의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6)) “中, 푸틴 “핵전쟁 준비돼” 언급에 “러, 핵전쟁 방지 성명 발표”, 『연합뉴스』, 2024.3.13.

7)) “‘미국과 잘 풀어야 하는데’...‘호전적’ 북-러 밀착에 심기불편 中”, 『문화일보』, 2024.1.24.